올해 스마트공장에 작년 예산 2.6배 증액

3428억 투입, 4000곳 구축

중기부 스마트공장확산 사업
신규 구축, 0.5억→1억 확대
시범공장 25개 보급, 3억 지원

〈2019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금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구축	1억원
	고도화	(기초)1억원(중간이상 1.5억원)
	대중소 상생형	0.5억원 이내
	시범공장	3억원
	업종별 특화	1억원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3억원
스마트 마이스터		마이스터 인건비
스마트화역량 강화		컨설팅 비용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진단비용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공고 내용 확인 필요.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지원 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극대화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 342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4000곳 구축을 돕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1330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2800개, 대기업 등 민간이 1200개를 각각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각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 지원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구축 기업이 '레벨3 수준' 이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면 최고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선정절차도 간소화했다. 5주가 걸리던 선정 기간은 2주로 줄이고, 같은 해에 참여할 기회는 2회까지 허용해 1년 안에 기초 수준부터 고도화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 출연한 경우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시범공장은 25개 보급한다. 모델하우스처럼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편리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중 5개 기업은 로봇을 함께 구축해 최대 6억원까지도 수혜가 가능하다는게 중기부의 설명했다.

업종별로 특화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해당 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표기관은 협력사의 구축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많다면 스마트공장 수요 기업은 공동 구매 방식으로 도입 비용을 줄이고, 공급 기업은 비슷한 솔루션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올해 로봇을 활용한 제조혁신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렸다.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의 기업 15곳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5곳에도 로봇을 지원한다.

공장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노하우도 지원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도 도입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도 경제주체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급물살

국회에 관련 법안 3개 접수
중소기업정책의 일부 아닌
독자적인 기본법 마련 추진

종사자수만 640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법 제정 추진에 시동을 걸었고, 정부도 연구용역을 거쳐 자체 입법을 준비하고 나서면서다.

업계 안팎에선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전체의 85%인 약 300만개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이들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돕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통과를 약속하며 불을 붙였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등 10인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은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등 18인이 발의한 관련법까지 포함해 총 3개의 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등은 관련법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수행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언주 의원 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도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으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을 규정한 조문은 제21조의 제1항 제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가 유일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미했고, 소상공인정책 역시 중소기업정책의 일부로 끼워넣다보니 소상공인들에겐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국회와 별도로 소상공인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경제부총리로선 처음으로 서울 대방동에 있는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이 실질적인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경제구조의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그치지 않고 공정 경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하나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기존의 중소기업기본법의 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에 적합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적합한 소상공인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국회 접수 소상공인기본법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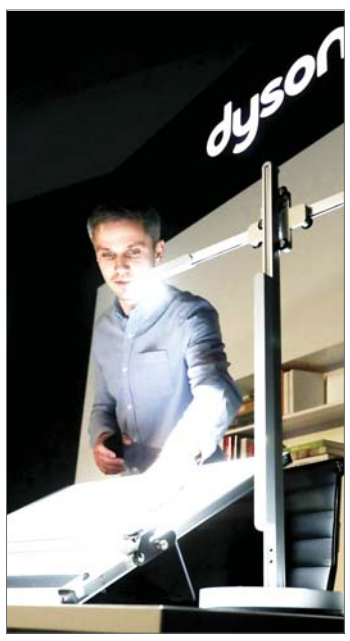
❶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의원 등 18인) -2018년 7월9일 제안
-주요 내용 : 중기부 장관이 5년마다 소상공인 기본 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소상공인진흥위원회 설치, 국가 및 지자체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장정책 수립·실시,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등

❷ 소상공인기본법안(홍철호의원 등 10인) -2019년 1월29일 제안
-주요 내용 :중기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

❸ 소상공인기본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19년 1월30일 제안
-주요 내용 :소상공인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수행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세 감면 등

자연광 추적 조명… "60년 사용 가능"

다이슨 조명 신제품 공개
시간대 맞는 '최적의 빛' 제공
2년 동안 개발… 건강에 초점



영국 유명 가전업체 다이슨의 사이먼 크로스 연구디자인개발부 선임 디자이너가 12일 서울 강남구 서울옥션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내활동 시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빛을 제공하는 가정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다이슨 라이트사이클 태스크 조명'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웰빙을 고려한 조명으로 국내 조명 시장에 발을 들였다. 다이슨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 서울옥션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이슨 라이트사이클 테스크 조명'을 선보였다.

다이슨이 국내에서 조명 제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한 신제품은 다이슨의 2세대 조명 제품으로 한국에 앞서 프랑스, 일본, 중국에 출시됐다. 한국 소비자가 웰빙에 민감한 점을 파악해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라이트사이클 테스크 조명은 9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2년여에 걸친 개발 기간 동안 892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들은 자연광과 달리 인공조명이 주는 해로움을 인식해 건강한 습관을 위한 조명을 개발했다.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광 추적을 통해 실내에서 최적의 빛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이먼 크로스 다이슨 엔지니어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을 위해 적절한 색과 밝기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시간, 날짜, 장소 등 세 요건에 기초한 고유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사용지역의 일광에 맞게 지속적으로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시간대에 맞는 최적의 빛을 제공한다.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하루 중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인공위성이 전송하는 100만 개 이상의 자연광 상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됐다. 조명에 내장된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 자연광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한 후 옵티컬 드라이버에 전달, 다양한 빛의 색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따뜻한 색온도의 LED 3개와 차가운 색온도의 LED 3개를 통해 2700~6500 켈빈(K)의 자연광 색온도를 재현한다.

눈 보호에도 신경 썼다. 약한 조명, 깜빡임, 눈부심은 눈의 피로도를 상승시키는데 다이슨 라이트사이클 테스크 조명은 1000룩스 이상의 밝기, 눈부심 방지, 낮은 깜빡임 기능이 결합돼 고품질의 빛을 균일하게 제공한다.

다이슨 라이트사이클 테스크 조명은 데스크형과 플로어스탠드형으로 제공되며 화이트·실버, 블랙 등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데스크형이 66만원 플로어스탠드형이 96만원이다./구서윤 기자 yun2514@

'창립 20주년' 휴넷 … 2000명에 무료 교육 제공

취약계층에 온라인 수강권

휴넷은 저소득층 2000명에게 공인중개사 교육 수강권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권대욱 회장(오른쪽)이 서울 사랑의열매 황우영 사무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휴넷

휴넷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2000명에게 공인중개사 교육 수강권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부한 수강권은 한기장복지재단을 통해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휴넷은 이번 기부를 통해 인기 국가자격증인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 준비과정 전체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전달식에 참석한 권대욱 휴넷 회장은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힘이요 원천이며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휴넷의 작은 정성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의 도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휴넷은 2016년부터 서울사랑의열매를 통해 교육 수강권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